4기 지방자치 출범, 건설 공약 점검

지역 중소 건설업체‘ 배려 ’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단초

- 가능성없는空約정리하되‘ 먹고사는문제 의公約은성실히이행하기를-

선거 공약 성실히 이행돼야

7월 1일부터 4기지방자치시대가개막됐다. 도 · 광역시의 광역 자치단체 16곳과 시 · 군 · 구 기초자치단체 230곳의 살림을 떠맡을지자체장들이새로운의지와각오를 갖고 지역발전을위한포부를시책으로풀어놓기 시작한 것이다. 지자체장들은 주민들이 살기좋은 지자체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담아표로밀어준만큼이에대한보답을구체적인행동으로보여줘야할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장들이 선거 운동 때 내걸었던 각종 공약이 헛구호에 그쳤는지, 아니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사후에 따져보는 매니페스토 운동을전개하기로한만큼약속사항을얼마나실천하는지는지자체장스스로의미래 행보에도큰영향을미칠것이다.

국민들은4기지자체가1995년출범이후 지금까지 잘못했거나 미흡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시정하고 보완해 보다 나은 시책을 펼쳐주길갈망하고있다. 특히먹고사는문제를잘 해결해 달라는주문을특별히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장들은CEO 마인드를 갖추고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투자를활성화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지자체를 만들도록해야한다.

전통적인 행정 관료형이나 정치가형, 제도개발등학자형, 인기영합주의적인덕장형 등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인물이라는 점을명심해야한다. 선심성행정을통한예산낭비와전시성행정, 투명하지못한밀실행정, 무사안일주의 등은 지자체장들이 가장 경계해야할사항이다.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은 정리해야

각 지자체장들이 선거 운동 때 내걸었던 각종건설관련공약은여러측면에서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표부터 얻고 보자는 식으로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던져놓고본공약이매우많으며, 이를실행에 옮기려면 중앙정부와의 정책 조율이 필요하고, 또 현 법률 체계나 제도의 변경 없이는 현실화될 수 없는 공약이 수두룩하다는얘기다.

이를테면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뉴타운 건설이나 도심지 일부의 고밀 개발,「수도권정비법」폐지 등은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과제라고 한다. 박성효 대전시장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중부권 최고의 레저스포츠 단지 개발은 개발예정지가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대규모환경파괴우려가있어 실현이어려운공약으로분류된다.

또한, 법이나제도상별문제가없고중앙

정부와의 마찰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원 조달이 어려워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도 많다. 이를테면 안상수 인천시장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인천뉴시티 건설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을 능가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천문학적 비용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태환 초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진하려는 '산남지역 제2혁신도시 건설' 등 개발 사업은 수조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매머드급'이어서 실제로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밖에 개발예정지의 주민 반발과 거주자 이주 문제 등이 여의치 않아 사업 시행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도 많다. 법·제도 미비나 중앙정부와의 마찰, 자금조달의 어려움, 주민반발 등 그어느것이 됐건 시행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개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개발은 기반 시설 조성이 선행돼야

대부분 지자체장들은 도심지 재개발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예컨대 서울시장은 강북과 강남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강북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인천시장도 뉴타운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전시장도 역세권 개발과 뉴타운 프로젝트를 약속한 상태다.

재개발 사업은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새로 정비해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며, 이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단순한 정치적 목적을 초월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념해야 할 것은 주택 건설이 전에 도로, 공원, 교육, 환경 관련 시설 등 기반 시설부터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택부터 지어놓고 교통시설이나 학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제대로 건설하지 않아 지역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삶이 피곤해지고 각박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 뉴욕 맨해튼 남부에 조성된 고급 주상복합 타운 '배터리 파크'처럼 공원, 학교 등 공공 시설을 먼저 조성하고 주거 건물을 배치해야 재개발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도심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오피스와 상업, 문화, 주거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기능하도록 건설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는 일본 도쿄 록본기힐스의 복합개발 성공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오서울시장이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되 녹지와 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해 동대문시장과 연계한다든가, 세운상가와 대림상가를 철거하고 그지하에 쇼핑센터 등을 넣는 것, 주택개발 시 환경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등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환경+문화'결합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구상이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과의 조화 이뤄야

정부는 민간 기업과 지자체가 중심이 된 기업도시를 전국 여러 지역에 건설하도록 이미 지정을 완료해 놓은 상태다. 인구 50만명 정도의 자족도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도시는 산업교역형, 혁신거점형, 관광·레저형 등 여러 유형이 있으나, 어떤 유형이 됐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어야 비로소 성공적인 건설이 가능한 것들이다. 특히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 시설은 지자체의 주도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정부가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각 지역에서는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건설이 예정되고 있다. 혁신도시는 기업도시와는 달리 지자체 중심으로 건설되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기업과 대학, 연구소, 지자체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클러스터 조성도 추진되고 있다. 이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간의 구분이 애매하고 자칫 중복 추진되거나 상호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도시들이 상호 조화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에서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중복 투자와 무계획한 투자는 재원을 낭비하고 투기 유발을 통한 부동산 값 급등만을 초래할 뿐이다.

지방 건설업체 특별히 배려해야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방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학교, 군대막사, 하수관로, 대학 기숙사 공사 등을 300억 400억원 단위로 묶어 BTL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일감이 갈수록 줄고 있다. 또한 이 때문에 지방 영세업체 위주로 문을 닫는 건설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신고된 폐업업체수는 426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7%나 늘었다. 또 2년간 연평균 2억 5,000만 5억원 공사 실적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도 565개 사로 전년 동기 대비 78.8%나 늘었다.

이처럼 지방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소규모 지역 건설공사는 지자체 재정 발주 사업으로 해주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지방건설업체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다. 아울러 공급이 넘치는 건물을 신축하기보다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주민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도로, 교량 등 토목공사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J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